

저출산에 대한 인식지평 확장: 사적이고 친밀한 영역에서 향유하는/할 수 있는 가치*

구은정**

초 록

본 논문은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첫째, 현 한국사회 저출산 현상에 대해 행위자의 행위선택 맥락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롭게 해석한다. 둘째, 사적이고 친밀한 영역(private-familiar sphere)에서 향유하는/할 수 있는 가치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한다. 기존연구에서는 저출산 현상의 원인으로 경제적 어려움, 양성평등 의식 고양과 개인화에 따른 자기이익 추구 등을 지목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빈곤에 시달렸던 근대초기에도 결혼·출산·육아는 이어졌다. 또 개인화된 행위자는 왜 가족돌봄보다 직업을 추구하는지, 그 기제는 논의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첫째, 변화되는 사회·경제적 구조와 조응하는 자아정체성을 매개로 행위자의 행위선택 맥락을 이해한다. 이를 위해, 타인의 인정을 통해 자아를 형성한다는 호네프의 인정이론과 행동 경제학에서 타인과 구별됨과 동시에 사회에 뿌리내린 자아정체성을 의미하는 개성화(individuation) 개념을 고찰한다. 이로부터, 개인적 성취가 사회적 인정을 얻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는 현 한국사회에서, 결혼·출산·육아의 기피란 개인적 성취/직업적 성취를 통해 개성화된 자아정체성을 획득하려는 행위전략임을 해석한다. 둘째, 친밀하고 사적인 영역이 개인의 삶에서 차지하는 기능과 목적을 고찰한다. 이를 위해, 사회경제학에서 이론화한 경제활동의 세 가지 영역과 반 스타베런이 밝힌 각 영역에서 창출되는 가치들을 호네프의 근대사회 세 가지 인정영역과 연결해 논의한다. 이때 개인은 개인적 성취의 영역인 시장영역에선 이익과 불이익에 따라, 법 즉 정치영역에선 명예와 불명예에 따라 인정을 받는다. 그리고 사적이고 친밀한 영역에선 돌봄/애정/사랑의 가치를 향유하며 '있는 그대로의 존재'를 인정받아 삶을 변형시킨다. 사회적 위기의 관점에서 저출산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행위자를 반영하지 못한다. 그보다는 지금까지 논의에 기초할 때, 어떻게 개인이 사적이고 친밀한 영역에서 돌봄/애정의 가치를 향유하고 이를 통해 자신 그대로의 자아정체성을 획득하게 할 것인가가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한편 이 논문은 개인적 선호로 이해되던 행위선택을 집단 지향성(collective intentionality)으로 이해해 사회성을 포착했다는 의의가 있다.

주제어: 저출산, 개성화(individuation), 개인적 성취, 인정, 자아정체성, 가치향유, 집단 지향성

* 본 논문은 저자의 학위논문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eun2228@hanmail.net)

I. 문제 제기

2018년, 한국사회 합계 출산율은 세계 최초로 1.0명 아래로 떨어졌다¹⁾. 1970년대 산아제한 정책을 실시했던 고출산 사회였지만, 1983년 합계출산율이 인구 대체 수준인 2.1명 이하로 떨어진 후, 2005년 1.08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2017년 1.05명으로 다시 최저기록을, 2018년 그 기록은 또 갱신되었다. 2000년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2002년 합계출산율 1.17명으로 OECD 국가들 중 최저수준을 기록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저출산에 대한 위기 의식이 고조되고 정부의 공식적 대응이 이어졌다. 2004년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설치를 출발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06-2010년)」 수립, 「제2차 기본계획 (2011-2015년)」 시행을 거쳐, 현재 「제3차 기본계획 (2016-2020년)」을 시행 중이다(김영미, 2018). 지난 15년간 보수정권 진보정권을 가리지 않고 이어진 정부의 정책 대응, 이에 대해 분과학문을 망라해 펼쳐지는 비판적 연구와 제언(김영미, 2018; 김혜영, 2018; 신경아, 2010; 임광국, 2018; 정성호, 2018), 각종 미디어에서 쏟아지는 저출산에 대한 토론과 담론 등이 연일 이어졌다. 거칠게 말해, 할 수 있는 건다 했지만, 결과는 매년 갱신되는 세계 최저 합계출산율이다.

저출산 현상의 원인으로 첫째, 성장이 정체된 후기자본주의 시기 청년실업·주거비용 부담등의 경제적 요인, 둘째, 개인화(individualization)와 평등의식 고양이란 문화적 요인, 셋째 이에 따른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등이 지목된다. 따라서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각 가정, 개인의 부담을 줄이는 현재 저출산에 대한 정책방향은 타당하게 여겨진다. 그러나 앞 절에서 살펴 보았듯이 백약이 무효한 현재의 상황은, 저출산 현상을 인식하는 보다 근본적인 관점의 재고를 요구한다. 이때 저출산을 사회적 위기로 국가적 재앙으로 진단하며 쏟아내는 불안과 공포의 담론들과(김영미, 2018: 105) 달리, 정작 출산의 당사자인 청년, 여성들에게 저출산은 위기가 아닌, 삶의 선택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신경아, 2010: 105; 임광국, 2018: 95-96). 만약 후기산업사회에서 가족과 일상생활의 변화에(이재경, 2005) 조용하는 선택이라면, 구조와 조용한 개인의 선택이 위기의 원인일 수 없다.

사실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지는 경제적 요인에 대해, 초기산업화시기 사회적으로 만연한 빈곤 상황에서도 왜 결혼·출산·육아는 질문되지 않고 이어

1) “출산율 줄었다고? 2030 혼인가구는 늘었다”(경향신문, 2019.1.5)

졌는지, 현재와 맞물린 해석은 미흡하다. 초기산업화 시기와 다른 후기 산업사회에서 가족가치가 변화되어 가족보다는 개인을 우선하기 때문이라는 문화적 요인도 왜 개인이 적극적으로 이런 문화적 요인을 받아들이는지 해석되지 않았다. 왜 개인화된 개인은 언제나 사회진출을 선택하는지 질문하지 않았다. 질문 대신, 개인에게 사회진출이 이익이라는 가정을 암묵적으로 인정할 뿐이다. 평등의식이 고양된 남성은 왜 여성이 사회진출로 이동하는 만큼 가사노동 가족 돌봄을 분담하지 않는지를 질문한 연구는 부족하다. 다시 말해, 사회·경제적 문화적 요인인 구조와 조응하는 행위자에 대한 이해 없이, 구조에 대한 이해로 행위에 대한 설명을 대신할 뿐이다. 이런 이해는 행위자를 대상화하고, 행위자의 욕구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어렵게 한다. 따라서 구조와 조응한 개인의 행위선택 맥락을 심도 깊게 이해하고, 다른 선택을 가능하게 할 인식지평에 대한 탐색은, 저출산 현상에 대해 보다 본질적으로 이해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런 문제의식에 기반해, 본 연구는 저출산이란 현상에 대해 사회심리학적으로 구조와 조응하는 개인에 초점을 두고, 가치에 기반한 경제의 관점으로 이론적 대안을 모색한다. 먼저, 호네프(Honneth, 1996)의 인정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자아는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음으로 비로소 확립된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개인에게 의무 지워졌던 공동체 내에서의 역할과 규범에서 해방되는 근대적 주체성으로서 개인화(individualization) 개념은(Dawson, 2012: 307), 사회에 뿌리내리는 자아정체성, 즉 타인과 관계 맺는 자아를 비가시화한다. 이에 반해, 데이비스(Davis, 2013)가 행동경제학의 관점에서 제시한 개성화(individuation) 개념은 타인과 구별되는 개성을 지닌 자아와 타인과 관계맺는 사회에 뿌리내린 자아를 동시에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 개성화(individuation) 개념에 기반할 때, 결혼·출산·육아의 포기로 향하는 선택은 단순히 나만 잘살려는²⁾ 이기적 개인화가 아니다. 오히려 사회적 자아를 획득하려는 행위전략이다. 이는 청년을 여성을 단지 출산 당사자라는 이유로 위기의 주범으로 몰아세우기보다, 그 선택을 발생시킨 구조변화에 조응하는 개인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무엇보다, 둘째, 이는 곧 가족 즉 사적이고 친밀한 영역이(private-familiar sphere)³⁾ 개개인의 삶에서 차지하는 기능과 목적에(Elshtain, 1993) 대

2) “나 잘살려고 애 안넣는다고?”..한국당에 불난 청년들.(해럴드경제. 2018.9.10.)

3) 후기산업사회 가족에 대한 논의와 관련해,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비판하고, 다양한 가족, 혈연·혼인관계에서 벗어난 가족에 대한 많은 페미니스트들의 논의(이재경, 2005)는 타당하다. 단지 가족에 대한 고찰은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다루지 않는다. 이 글에서 가족은 사적이고 친밀한 영역의 하나이고, 출산·양육과 관계되는 대표적 영역으

해 질문할 것을 요구한다. 친밀하고 사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향유하는/해야 할 가치가 없다면, 사회를 존속시키기 위한 의무인 출산은 개인의 삶에서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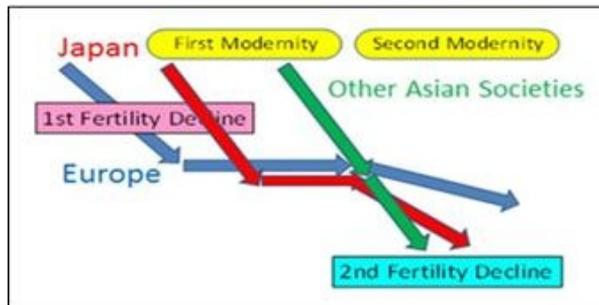
행위자의 행위선택인 결혼·출산·육아의 회피를 근대사회 개인의 개성화(individuation)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친밀하고 사적인 영역에서 향유하는 가치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저출산에 대한 새로운 인식지평을 열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다음 장에서, 현재 저출산 현상을 이해하는 틀인 이론적 논의, 젠더화된 도덕적 책임(gendered moral-responsibility) 논의들이(Gerson, 2002) 현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지만, 행위자의 행위선택 맥락에 대한 깊은 이해로 다른 가능성을 모색하기에 부족함을 논의한다. 제3장은 행위자의 행위선택 맥락의 변화를 호네프, 데이비스의 이론에 기대어 살펴본다. 제4장은 클라머(Klamer, 2017)의 가치에 기반한 경제 이론과 반 스타베런(Van Staveren, 2001)의 경제의 다원론적 가치 이론을 통해, 개개인의 삶을 번영시키기 위해 친밀하고 사적인 영역에서 향유해야 할 가치에 대해 규명한다. 제5장은 결론으로 행위자가 나날의 삶을 번영시키기 위해 필요한 가치들에 대한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현 한국사회 저출산 현상에 대한 인식지평을 넓히고 대안적 논의를 시작하는 토대로 이 글에서 이론적 틀을 제시했음을 밝힌다.

이 글은 첫째, 행위자가 자아정체성 획득을 위해 구조와 조응해 형성하는 행위선택 맥락에 대한 이해를 높여, 사회적으로 저출산 현상을 유발할 수 있는 개개인의 행위선택이 타인의 인정을 획득하기 위한 전략임을 밝혔다. 이는, 둘째, 기존에 개인적 선호나 가치관 등 개인적 수준에서 이해해 본격적으로 논의 대상으로 끌어오지 못했던 개개인의 행위선택을 집단지향성(collective intentionality)으로 이해해, 행위선택의 사회성을 포착했다는 의의가 있다.

II. 저출산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젠더화된 도덕 이론

1. 저출산에 대한 이론적 논의

오치아이(Ochiai, 2014)에 따르면, 근대사회에서 여성의 출산력 감소는 두 단계를 거친다. 그러나 한국과 같이 압축적 근대화를 거친 사회는(Chang, 2010), 이 두 단계가 구분 없이 이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자료 : Ochiai, 2014: 217 figure 3.

[그림 1] 제1차 근대와 제2차 근대 사이 출산력 감소

먼저 출산력 감소와 관련해 제1차 근대는, 산업사회의 도래와 성별분업을 특징으로 한다. 제1차 근대 시기는 남성의 부양노동과 여성의 가사노동으로 이루어지는 핵가족이 보편화된다. 핵가족 하에서 부부는 각각의 자녀들에게 최대의 사랑과 물질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을 감소시킨다. 피임기술의 발달은 출산을 통제하려는 행위자의 선택을 가능하게 했다. 반면, 제2차 근대는 가족 가치 변화로 탈가족화가 추동되는 후기산업사회의 맥락에서 발생한다. 이때 개인은 자유롭게 생활양식(life style)을 선택하기 위해 결혼과 출산을 조절한다. 근대화를 먼저 오랜 시간 겪어낸 서구사회의 경우 이 두 단계 사이 출산력이 정체되는 시기가 존재한다. 이 시기 사회는 새로운 인구구성에 적응하고 대응한다. 반면 [그림 1]에서 보면, 일본의 경우 유럽에 비해 정체되는 시기가 짧고, 한국이 속하는 다른 아시안 사회에서는 그 시기를 거치지 않고 급격하게 출산력이 감소한다.

이렇게 [그림 1]은 압축적 근대화로 제1차 근대와 제2차 근대가 중첩된 한국사회에선, 서구사회와 같이 저출산에 대응해 새로운 정책을 실험하고, 새로운 인구구성에 적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음을 보여준다. 행위자의 측면에서 이

는, 각각의 자녀에게 사랑과 물질을 충분히 지원하고픈 욕구와 자유롭게 각자의 생활양식을 선택하고픈 욕구의 중첩을 의미한다. 가령, 여성 친화적 정책(women friendly policy), 가족 친화적 정책(family friendly policy), 일·가족 균형(work family balance) 등의 개념은 모두 가족 돌봄의 일차적 당사자로 여성을 전제한다. 이런 전제를 바탕으로, 여성이 가족을 돌보면서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었다(Koo, 2018: 19). 따라서 이런 개념에 따른 정책은 제1차 근대와 제2차 근대 사이에 시행되는 것이 적합하다. 즉 그동안 전업주부 역할을 수행하며 자녀들에게 최대의 사랑을 주었던 여성들이 주부역할을 하면서 지불노동을 병행하고자 할 때 필요한 정책들이다. 그러나 출산율이 정체되는 중간시기가 없었던 한국사회에서 이런 정책은 ‘여성 없는 여성정책(신경아, 2010)’이란 비판으로 상징되듯, 이미 가족 돌봄을 여성의 일차적 역할로 받아들이지 않는 여성들의 욕구와 어긋난다. 때문에 정책 실행이 기대했던 효과로 이어지긴 어려웠다.

이에 반해, 최근 한국사회에서 트렌드(trend)로 자리잡은 ‘워라벨(work 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 개념은 가족이 아닌 개인이 단위다. 일상에서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개개인이 원하는 생활양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는 개념이다. 이는 개개인의 구체적인 상황과 욕구를 고려하는 ‘사람 중심 정책’으로 저출산 패러다임의 전환을 꾀하려는 현 정부의 정책방향과 잘 맞는다(이동욱, 2018). 현 한국사회가 후기산업사회 즉 제2차 근대 시기임을 고려할 때 적절한 정책방향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패러다임 전환이란 구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는지 방법을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과 함께(정성호, 2018), 개개인의 구체적 상황과 욕구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했는지 의문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결혼·출산·양육을 개인의 의무가 아닌 권리로, 즉 ‘재생산권’의 개념으로 재구성한 논의는(김영미, 2018), 사회적 위기가 아니라 개인의 권리 관점에서 저출산 현상에 접근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논의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개인이 얼마나 그 권리를 욕망하고 주장하는지에 대한 고려는 미흡하다. 단지 그 권리를 욕망할 것을 전제할 뿐이다.

다시 말해, 개인이 욕망하는 삶의 방향에 대한 고려 없이, 개인은 결혼·출산·육아를 원하지만 경제적 사회적 조건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결혼·출산·육아를 선택하지 못하는 것으로 가정된다. 세간에 회자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했다는 삼포세대라는 어휘 역시 이 가정을 함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가정과 다소 어긋나게, 성관계와 결혼·출산은 점점 분리되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결혼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결혼

으로 정서적으로 더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노후에 자녀가 자신을 부양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⁴⁾. 즉 결혼·출산이 개인의 삶에서 갖는 유의미성은 축소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가족 또는 개인의 육아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표로 이야기되는 저출산 담론은, 결혼·출산·육아는 개인에게 ‘부담’이라는 부정적 정서를 내포하고 있다. 이런 부정적 정서는 앞선 유의미성 축소와 연관되고, 결혼·출산을 욕망하지 않는 개인을 양산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 즉 행위자를 둘러싼 외적 조건에 친착한 저출산 담론은, 개개인이 느끼는 결혼과 출산의 의미를 포함하지 못한다. 이는 곧 과거 절대적 빈곤 속에서도 의심 없이 지속되었던 결혼·출산이, 왜 지금 상대적 빈곤 속에서 유독 문제인지 답하지 못한다. 이에 대해 양성평등의식 고양과 개인화를 원인으로 제기하지만, 각각의 원인들을 유기적으로 연관해 저출산 현상을 해석하지는 못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결혼·출산·육아가 개인의 삶에서 차지하는 의미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는, 가족가치 변화와 이에 따른 탈가족화란 제2차 근대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개개인의 삶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정책 패러다임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정성호(2009)는 저출산 원인에 대한 이론적 논의로 합리적 선택이론, 탈물질주의적 가치이론, 젠더·가족·시장·국가 등 제도적 변화, 양성평등이론, 선호이론 등을 서술하고, 이를 통해 현 한국사회 저출산 현상의 원인을 논의한다. 먼저, 주류경제학 이론의 핵심인 합리적 선택이론은, 아이 출산에 따르는 간접비용 혹은 기회비용이 출산으로 얻는 혜택을 넘어서기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는 것으로 저출산을 해석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언제나 비용과 혜택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비판도 타당하다. 탈물질적 가치이론에 따를 때, 저출산은 개인의 자아실현, 개인적 선호에 대한 만족, 전통적 권위로부터의 자유 등을 추구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결과다. 이는 개개인이 자신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기 위해 출산을 기피하는, 앞서 서술한 제2차 근대 시기 출산력 감소의 특징이다. 따라서 아이양육이 삶에서 중요하고 삶을 풍요롭게 한다고 느낄 때, 개인은 출산을 선택할 것이다. 제도적 변화의 측면에서, 한국사회에서는 19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시장체제로의 전환이 중요하다. 시장에서 높은 생산력을 입증해야 하는 개인에게 재생산은 즉 출산·육아는 개인의 생산력을 높이는 데 걸림돌이다. 때문에 개인은 출산을 기피한다. 양성평등이론은 저출산에 대한 가장 대표적 이론으로, 출산·육아는 여성에게 교육과 고용에서 기회 박탈

4) “굳이 연인에서 부부로?...결혼할 이유가 없어요” (아시아경제. 2019.1.7.)

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결국 출산을 꺼린다는 것이다. 선호이론은 문화적 요인을 강조하며 여성이 일과 가족 어느 쪽을 선호할 것인가에 초점을 둔다. 그러나 개인의 선호보다 삶의 구체적 상황과 배경이 개인의 지향에, 행위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다양한 이론은 모두 저출산 현상의 한 측면을 설명하고, 복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정성호(2009: 176-180)는 경기 후퇴에 따른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양성평등 관념의 확산과 후기근대 가치관의 변화로 인한 가족형성의 지연과 약화 등이 모두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현 한국사회 저출산을 가져온 것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탈근대적 가치관의 변화를 고려해, 결혼의 중요성, 삶에서 자녀의 중요성 등에 관한 가치관 확산에 노력을 기울일 것을 제시한다. 결혼과 자녀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가치관 확산에 대한 제안은, 청년과 여성에게 저출산은 위기가 아닌 선택이라는 논의를(신경아, 2010: 105; 임광국, 2018: 95-96) 고려할 때 타당하게 여겨진다.

그러나 이 제안은 두 가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근대 초기 가족에게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사랑을 주는 것을 여성의 의무로 강조한 모성담론처럼, 사회적 규범으로 작용해 개인의 '선택'을 방해할 수 있다. 즉, 결혼과 자녀의 유의미성이 감소하는 맥락에서, 개인이 느끼지 못하는 중요성에 대한 강조는 행위자 외부에서 행위선택을 강제하는 압력일 뿐이다. 둘째, 건강가족 담론처럼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강화할 수 있다. 즉 가족문제를 개인의 도덕적 문제로 환원하고 사적영역에 대한 국가 통제를 정당화하는(강희경, 2005)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사실 결혼과 자녀의 중요성이 감소되는 맥락에서, 과연 개인의 삶에서 결혼과 자녀가 중요한지 묻는 것이 우선이다. 질문하지 않고 중요성을 전제하는 것은, 탈근대적 가치관의 변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즉 개인의 욕망을 고려하지 않는 접근이다. 개인의 삶에서 결혼과 자녀의 중요성에 대한 질문은, 이 논문에서 밝히고자 하는, 개인이 사적이고 친밀한 공간에서 향유하는/할 수 있는 가치와 연관된다. 개인이 사적이고 친밀한 공간에서 향유하는/할 수 있는 가치를 밝히고, 그 가치를 인식할 때, 비로소 개인은 그 가치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이 글의 중심 내용으로 제3장과 제4장에서 다룰 것이다. 그전에 저출산을 설명하는 핵심이론인 양성평등이론과 맞물린 젠더화된 도덕이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젠더화된 도덕이론

양성평등이론에 따르면, 평등의식이 고양된 여성들이 직업노동에 진출하면서 상대적으로 그동안 여성이 전담했던 돌봄에 공백이 생기고, 이 돌봄 공백의 한 양상이 저출산이다. 즉 평등의식이 높고 개인화(individualization)된 여성은 그동안 담당했던 가사/돌봄 노동을 철회한다. 그러나 평등의식이 높고 개인화된 남성은 여성이 철회한 만큼 가사/돌봄을 담당하지 않는다. 이를 후설드(Hochschild & Machung, 2012)는 “지체된 혁명(the stalled revolution)”으로 표현했다. 성별로 불평등한 가사노동 분담은 시간 유용성, 상대적 자원, 그리고 성정체성 등의 이론으로 설명된다(Davis & Wills, 2014). 그리고 이 세 가지 이론적 설명은 서로 얽혀있다. 즉 다른 성정체성에 의해 여성이 돌봄/가사노동을 더 분담한다. 따라서 여성은 가사노동에 남성은 임금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이때 남성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자원을 더 많이 획득하고 가사노동 분담 협상에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비단 권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동으로 가계를 꾸리는 부부는 자발적으로, 임금이 더 높은 한편이 임금노동을 상대는 가사노동을 더 담당하는 것으로 합의할 수 있다⁵⁾. 즉 개별 가정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과 원하는 방향에 따라 경제학에서 얘기하듯 효용을 최대화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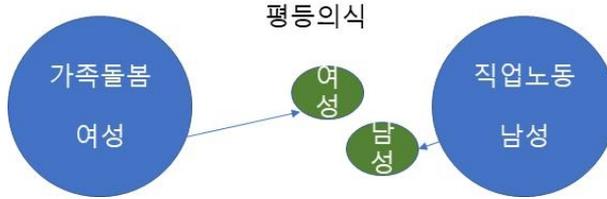
그러나 각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가사노동 분담은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이 아니다(Barstad, 2014). 다시 말해, 개별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분담된 가사노동의 합이 언제나 필요를 채우는 것은 아니다. 현재 한국사회 개별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돌봄/가사노동 분담은 갈등을 유발하고, 사회 전체적으론 돌봄 공백을 유발한다. 이는 거칠게 얘기해, 사회 전체적으로 가족 돌봄보다는 직업노동에 대한 선호를 잃어낼 수 있다. 그러나 돌봄보다 직업노동에 대한 사회적 선호는 젠더화된 도덕 이론과 가사노동 분담을 제로섬 게임을 여겼던 가정에 의해 드러나지 못했다. 즉 젠더를 중심으로 한 가사노동 분담에 대한 관심은 여성의 탈가족화에 초점을 두었지만, 남성의 재가족화를 간과했던 한계가 있다(윤홍식, 2011). 이는 여성의 탈가족화가 남성의 재가족화를

5) 물론 개인이 효용성을 최대화하는 합리적 선택에 기반 해 행동한다는 주류 경제학 이론이 경험적 실재를 포착하지 못함을 드러내는 연구들이 있다. 이런 연구들에 따르면 (Bittman 외, 2003; Greenstein, 2000), 남편과 아내의 임금 수준이 비슷할 때까지,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은 높아지고 아내의 분담은 낮아진다. 그러나 아내의 임금이 남편의 임금을 넘어서면서 오히려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은 줄어들고 아내는 더 많은 가사노동을 담당한다. 이에 대해 저자들은 뒤바뀐 젠더역할을 보상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자연스럽게 도출할 것으로 여겨, 즉 가사노동 분담을 제로섬게임으로 가정했기 때문이다.

이를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 길리건의 경험적 연구로 시작된, 젠더화된 도덕 이론을 살펴보자. 길리건(1997)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소년들이 올바름과 규칙에 기반한 정의의 윤리로 갈등 상황에서 해결을 모색함을 밝혀냈다. 반면 소녀들은 책임과 관계에 기반한 돌봄 윤리로 갈등을 해결하고 대책을 모색했다. 길리건은 이 연구를 통해, 여성들은 도덕영역에서 벗어나거나 낮은 도덕단계에 머무는 것으로 평가했던 기존 도덕철학 논의를 반증했다. 그러나 돌봄과 여성을 연결시켜 결국 여성에게 돌봄 책임을 지웠던 기존의 관습을 강화한다는 비판에도 직면했다. 한편 트론토(Tronto, 1987)는 남성과 여성에게 이분법적으로 발달된 윤리가 심리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님을 해석했다. 즉 젠더화된 윤리를 각기 다른 사회적 위치에 따른 결과로 재해석해 기존 관습을 강화한다는 비판을 넘어섰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젠더화된 도덕은 여성의 돌봄, 남성의 직업노동이란 행위선택을, 그리고 이에 따른 불평등한 가사/돌봄노동 분담을 설명하는 타당한 이론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이 이분법적으로 젠더화된 도덕 이론은 평등의식의 고양으로 전통적 성역할에서 벗어날 때 나타나는 젠더 차이를 설명하기엔 잘 들어맞지 않는다. 평등의식 고양은 전통적으로 의무 지워졌던 성역할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여성들이 활발하게 직업을 갖고 독립적 주체가 되려는 움직임(Conlon et al., 2014; Gerson, 2002; Hochschild, 2012) 잘 설명한다. 그러나 평등의식이 고양된 남성들은 왜 남성들의 전통적 성역할로 여겨지는 직업노동에서 벗어나 가족 돌봄을 분담하지 않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그림 2]는 이 젠더 차이를 도식화했다. 즉, 젠더화된 도덕 이론은 전통적으로 여성은 가족 돌봄을 남성은 직업노동을 담당했음을 잘 설명한다. 그리고 평등의식이 고양되면서, 전통적인 성역할에서 벗어난 여성은 직업노동으로 성큼 다가갔음을 [그림 2]는 표현한다. 한편, 여성이 직업노동으로 다가간 것만큼 남성은 가족 돌봄으로 다가가지 못했고, 이는 곧 돌봄 공백을 발생시킨다. 즉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젠더화된 도덕적 책임분담이 흐려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평등한 역할분담보다는 남성과 여성 모두 가족 돌봄 보다 직업노동에 쏠려있다. 그리고 이렇게 직업노동을 선호하는 배경으로 자기이익 실현을 중심에 놓는 개인화(individualization)된 근대적 개인을 지목한다. 그러나 왜 직업노동을 선택하는 것이 가족 돌봄을 선택하는 것보다 더 자기이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



[그림 2] 전통적인 성역할에 벗어날 때 젠더 차이

이는 저출산 현상의 한 원인으로 일상의 삶이 과도하게 시장체제에 잠식되었다는 점을 지목할 때 비로소 이해될 수 있다. 즉 평등의식 고양과 자아실현 및 개인적 선호에 대한 만족 추구 등 탈근대 가치관의 형성이 시장체제에 잠식된 일상적 삶의 맥락과 얽혀, 물질적 가치 추구라는 일방향으로 표출된다. 이렇게 저출산 현상에 대해 심도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개별적인 원인들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이 개별 원인들이 얽히고설킨 유기적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이론적 논의는 부족하다. 개인의 행위선택 맥락에 대한 구조적 이해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친밀하고 사적인 영역에서 향유하는/할 수 있는 가치에 대한 논의는 자칫 개인적 가치관에 대한 이해로 폄하되거나 낭만주의적 관점으로 치부될 수 있다. 따라서 다음 장에선, 근대사회 개인을 강제하는 구조적 맥락에 대해 고찰한다. 즉 개인의 자아정체성 형성과 연관해, 구조와 조응하는 개인의 행위선택 맥락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III. 행위자의 행위선택 맥락에 대한 이해

이 장에서는 구조와 조응해 형성되는 개인의 행위선택 맥락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두 가지 이론을 살펴본다. 첫째 개인의 자아는 언제나 타자와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된다는 사회심리학 이론이다. 둘째, 개인의 자아정체성은 타인과 구별되는 개인화(individualization)의 산물이 아니라, 타인과 구분되지만 동시에 사회에 뿌리내림을 추구하는 개성화(individuation)의 산물이라는 행동경제학 이론이다. 이는 개인의 행위선택이 개인적 취향이나 단순한 선호·기호에 따른 것이 아니라, 사회적 존재로 인정받기 위한 투쟁임을 의미한다. 이런 개성화 개념에 따를 때, 현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결혼·출산·육아의 기피 현상은 개인이 타인의 인정을 얻기 위한 선택전략의 일면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자.

1. 타인의 인정으로 확립되는 자아(the self)

호네트(Honneth, 1996)의 인정이론은, 개인이 자아를 형성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조건으로 타인의 인정을 자리매김한다. 이는 호네트의 인정이론이 기반한 상징적 상호작용이론(Mead, 1967)에서 더 분명하게 이론화된다.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에선, 타인 그리고 외적 조건과의 상호작용을 설명하기 위한 개인의 “I”와 “me”를 구분한다. 이때 “me”는 타인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감시자(censor)로 역할하고(Denzin, 1969: 210), “I”는 이 감시자의 관점을 성찰·통합해 반응을 발생시킨다. 이때 “I”에 의해 성찰되어 통합되는 “me”의 관점, 이 과정은 자아를 형성하는 핵심 기제다. 이때 “me”는 일반화된 타자(the generalized other)와 유의미한 타자(significant others)를 포함한다. 일반화된 타자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규범, 규칙, 문화적 견해 등으로 보통 오랜 시간 지속되고 넓은 공동체에서 통용되는 관점을 의미한다. 유의미한 타자란 개인이 주로 관계 맺고 영향을 받는 대상으로 친구, 부모, 가족 등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I”에게 일반화된 타자 “me”는 때로 유의미한 타자를 매개로 상호작용한다.

예를 들어, 여성이 가족 돌봄을 담당해야 한다는 사회적 규범은, 보통 가족 돌봄을 수행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매개로 행위자와 우선적으로 상호작용한다. 즉 여성인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 여성인 내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 소통한다. 여성의 성역할이란 일반화된 타자 “me”의 눈으로 동생을 돌보지 않고 친구와 노는 여성인 나를 “I”는 성찰한다. 그리고 좀더 ‘여성스러워지라고’ 권고하는 내면의 목소리를 낸다. 한편 성평등 의식의 고양은 책이나 개인이 속한 사회와 다른 더 평등한 사회의 모습과 상호작용하며 형성될 수 있다. 또는 보다 먼저 성평등을 실천하는 친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접하게 될 수도 있다. 성평등을 실천하는 친구를 통해 얻은 “me”의 관점을 성찰한 “I”는 성인인 남편의 밥상은 안차려줘도 된다고 나에게 조언하는 내면의 목소리를 낸다. 이런 타인의 관점과 융합되어 형성되는 자아정체성이 의미하는 것은, 타인과 분리되는/ 구별되는 자아를 이야기하는 개인화(individualization) 개념의 미흡함이다. 즉 개인화 개념은 온전하게 개인의 정체성과 연관해 행위선택을 설명하기에 부족하고, 이는 다음 절에서 논의될 것이다.

호네트 이론과 관련해 여기서 논의할 점은, 전근대와 근대사회에서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획득하는 기준의 변화다. 호네트에 따르면(Fraser and Honneth, 2003: 110-197) 전근대사회에서는 개인이 사회적 인정을 얻는 하나의 기준

이 있다. 그 기준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개인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인이 속한 공동체가 개인에게 부과한 역할과 규범을 잘 지켜야 한다. 즉 역할과 규범을 잘 지켰을 때 비로소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되고, 이를 통해 개인은 자아정체성을 형성한다. 이렇게 단일한 기준으로 자아정체성이 확립되는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합의된 성역할이나 규범을 따르는 것은 자아정체성 확립과 직결된다. 이에 반해, 부르주아 사회가 형성되면서 이 단일한 기준은 세 가지로 분화된다. 첫 번째, 지불노동이 종교적 소명으로 연결되는 세속화 과정에서, 개인적 성취(individual achievement)는 사회적 인정을 획득하는 주도적인 문화적 관념으로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떠올랐다. 두 번째는 전근대 귀속적 계층적 신분제가 붕괴되면서, 새롭게 인정을 획득하는 기본 영역으로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법적 평등이란 규범적 원칙이다. 세 번째, 근대 부르주아 관념에 따라 사랑의 영역, 즉 결혼, 자녀 돌봄, 부부간 안녕을 위해 서로 사랑을 나누며, 이를 통해 획득되는 인정이다.

이런 호네프의 이론을 저출산과 관련해 적용하면, 전근대사회에서 개인은 공동체가 부과한 역할과 의무, 즉 결혼·출산·육아를 잘 수행할 때 비로소 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정된다. 공동체내에서 사회적 인정을 획득하고, 이에 따라 가(家)의 누구라는 자아정체성을 확립한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경우 유교사상에 따라 일상적으로 성별 불평등이 만연했다 하더라도, 공동체에서 개인에게 부과한 성역할과 규범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했다. 외형적으로 근대국가로 형성된 한국전쟁 이후에도, 문화적으로 유교 유산은 개인의 일상에서 규범과 규칙으로 작용했다. 물론 젠더역할과 규범은 개인을 공동체에 속박하는 전근대적 관습으로 여겨져, 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개인화(individualization)가 근대성의 한 측면으로 이야기된다. 하지만 유교문화를 내면화한 개인에게 속박은 일방적이라기보다 정체성을 획득하기 위한 행위전략과 얽혀 있었다.

이에 반해 사회적 인정을 획득하는 주요한 기준으로 개인적 성취가 주도적인 문화적 관념으로 작동하는 현 한국사회에서, 이 전근대 행위전략은 물론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 대신 지불노동 즉 직업을 통해 사회적 정체성을 획득하는 개인의 행위선택이 우선된다. 세 번째영역, 개인적 성취가 주도적인 문화적 관념으로 자리 잡은 현대 한국사회에서, 직업은 사회적 정체성을 획득하는 주된 통로이기 때문이다. 이는 곧 앞서 평등의식의 고양에도 불구하고 여성과 남성 모두 가족 돌봄보다 직업노동을 선호하는 행위전략을 해석할 수 있게 해준다. 거칠게 얘기해, OECD 국가 중 한국 사람들이 지불노동에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가사노동이나 아이 돌봄에 가장 적은 시간을 소비한다는 통계

와(Miranda, 2011: 11-17; OECD, 2015: 171-201) 연결된다. 물론 현 한국사회에서 지불노동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개인이 좋아서 하는 온전한 자율적 선택일 수 없다. 퇴근시간에 퇴근하지 못하는 기업문화, 일하는 사람을 줄이고 과중한 업무를 할당하는 노동시장의 압박 등의 구조적 원인이 작동한다. 그러나 공동체의 규범을 내면화한 개인에게 속박이 개인의 행위 전략과 맞물리듯이, 개인은 노동시장, 기업문화 등 외적 조건과 상호작용해 행위를 주도한다. 이때 직업을 통해 사회적 정체성을 획득하려는 것은, 주어진 역할과 규범을 따르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획득하려 했던 행위 전략과 같은 맥락이다.

이를 좀 더 생각해 보면, 멕시코의 경우 우리와 비슷하게 지불노동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만, 가사노동과 자녀 돌봄에도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가사노동/자녀돌봄의 사회화·시장화가 덜 이루어졌기 때문일 수 있다. 한편 캐나다 등 우리보다 GDP가 높아 기계나 시장상품으로 가사노동이나 자녀돌봄을 대신할 소비능력이 높은 나라도 우리보다 더 많이 가사노동과 자녀 돌봄에 시간을 소비한다. 이런 나라들은 보통 우리보다 가사노동/자녀돌봄에 대한 사회화가 더 발달했다. 이러한 사례들을 고려할 때, 우리사회에서 가사노동과 자녀 돌봄에 가장 적은 시간을 쓴다는 것을, 관습적으로 가정하듯 장시간 지불노동에 시달렸기 때문으로 해석하는 것은 편협한 해석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우리는 개인적 성취를 위한 행위전략의 개입을 고려할 수 있다. 물론 호네프의 이론은 모든 근대사회에 적용되는 것이기에, 유독 우리사회에서 더 개인적 성취를 위한 행위전략이 두드러지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개인적 성취가 주도적인 문화적 관념으로 작동하더라도 시장에 잠식된 일상의 삶은 그 곁에 대한 논의를 필요로 한다⁶⁾.

두 번째 영역은 법적 평등이란 규범적 원칙이다. 가령 동성애를 추구하는 개인들은 아직 현 한국사회에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때문에 법적 영역에서 동성애자로서 정체성을 인정받지 못했고, ‘인정투쟁’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한국사회 다수에게 과거 신분제적 위계는 사라졌고, 법 앞에 평등은 원칙적 권리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경제적 권력 관계에서 불평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저출산 현상과 관련해, 현 한국사회에서 유교 문화적 관습은 과거보다 많이 약해졌지만, 여전히 여성에게 가사/돌봄 노동은 불평등하게 할당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들은 자율적으로 가사/돌봄 노동을 거부하기도 한다.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OECD 평균보다 크게

6) 이에 대해 다양한 사회에 대한 비교연구는 본 연구자의 능력과 본 논문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낮으면서도(OECD, 2013: 114-115; 2016: 222-239), 자녀 돌봄에 가장 적은 시간을 소비한다는(OECD, 2015: 171) 통계는 이를 간접적으로 설명한다. 또 여성의 경우 전통적 성역할 인식이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는(한인영, & 홍선희, 2011), 이를 보다 직접적으로 설명한다. 2005년 호주 제 폐지가 상징하듯, 한국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이 법 앞에 평등한 것은 자명해 보인다. 그러나 관습적 불평등과 이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 해소는 저출산 현상과 관련해, 여전히 시급하고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분명하다.

마지막으로, 시장에 잠식된 일상의 삶이란 측면에서, 과연 현 한국사회에서 개인은 세 번째인 사랑의 영역에서 자아정체성을 획득하기에 충분한 인정을 얻고 있는지 질문할 수 있다. 자녀교육에 집착하는 한국사회에서, 자녀교육이 애정과 사랑으로 자녀를 육체적 감성적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것에 중점을 둔다고 보기 어렵다. 그보단 미래 노동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우는 도구적 목적으로 향하고 있다. 부모의 이런 도구적 목적과 상호작용하는 자녀가 어떤 자아정체감을 획득할 것인지 질문해야 한다. 아마도 존재자체로 충분히 인정을 받는다고 느끼고 그 인정을 바탕으로 자신을 긍정하는 자아정체감을 획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보다는 노동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능력, 단순하게는 성적, 즉 개인적 성취에 따라 자아정체감은 긍정과 부정을 오고갈 것이다. 마찬가지로 부모의 도구적 목적과 상호작용하는 자녀가 부모의 노력을 충분히 인정하고 고마움을 느낄지 의문이다. 오히려, 자신이 성취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주지 못하는 부모를 원망할 수 있다. 때문에 부모도 그들이 이런 개인적 성취에 따라 평가되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받지 못해, 자아정체감이 훼손될 수 있다.

즉 사적이고 친밀한 영역인 사랑의 영역이 시장에 잠식당했을 때, 시장영역, 즉 개인적 성취 영역에서 인정을 획득하기 위한 행위전략이 우선될 것이다. 이때 개인의 삶에서 친밀하고 사적인 영역의 의미는 축소될 것이다. 이는 다음장에서 논의될 사적이고 친밀한 영역에서 개인이 향유하는/할 수 있는 가치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 장에선 우선 개인화(individualization)와 개성화(individuation)의 차이, 그리고 개성화 개념을 활용해 저출산 현상을 개인의 행위전략 맥락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타인과 구별되며 사회 속에 뿌리내린 자아, 개성화 (individuation)

전통으로부터 해방되고 타인과 구별되는 개인화(individualization)와 타인과 구별됨과 동시에 존재론적으로 사회적 존재임을 분명히 하는 개성화(individuation) 개념은 비슷하지만 초점이 다소 다르다. 물론 개인화가 존재론적으로 사회적 존재인 인간을 부정하는 것도 근대초기에만 한정해 전통과의 단절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구조와 조응하는 행위자의 상호작용 맥락을 드러내, 결혼·출산·육아를 기피하는 행위선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개성화 개념이 더 적절하다.

이를 살펴보면, 개인화(individualization) 개념은, 첫째 자율성을 지닌 이성적 존재로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증진시키는 과정으로서의 개인화, 둘째 후기산업사회 복지국가의 후퇴로 사회적 위험과 모순의 개인화란 이중적 의미를 지닌다(신경아, 2013). 후자와 관련해, 벡(Becks)에 의하면 개인화는 제1차 근대성의 부작용을 넘어 제2차 근대성으로 향하는 추동력으로, 가족, 친족, 젠더, 계급 등과 같은 산업사회체제에 기반한 사회적 연대에서 벗어나 스스로 생존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의 변화를 의미한다(심영희, 2013: 280). 한국 사회와 관련된 연구에서 개인화 개념은, 권위주의적 국가체제 아래서 여전히 가족에 묶이고 고립된 개인화(심영희, 2013; Chang & Song, 2010), 경기 침체로 가족에 대한 일인생계부양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유의지와 관계없이 떠밀리고 개인화(임광국, 2018: 106-110) 등이 논의된다. 이런 개인화 개념은 독립성과 자율성을 증진시켜 근대적 주체로서의 자아를 획득하는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무엇보다, 여성, 돌봄, 저출산과 관련한 연구에서 주로 쓰이는 개인화(individualization) 개념은, 우선적으로 근대사회의 형성과 맞물려 전통으로부터 분리와 해방에 초점을(Dawson, 2012: 307) 둔 개념이다. 그리고 개인을 구속하는 축으로 첫째 전통, 둘째 집단적 정체성을 들고 있다(심영희, 2013: 281). 첫째, 전통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은 과거 전통적으로 개인에게 의무 지워졌던 역할 규범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 둘째, 집단적 정체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과거 귀속적 정체성이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 형성에 주된 역할을 했던 “봉건적 사슬(Banks & Milestone, 2011: 75)에서의 해방을 의미한다. 이런 개인화 개념은 여성이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의무 지워졌던 가족 돌봄이란 역할과 규범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신이 원하는 것 즉 직업

인이란 근대적 정체성을 선택하는 것을 해석하는데 활용되었다. 그리고 이때 자율성과 독립성을 증진시키는 핵심으로 직업인이란 근대적 정체성은 개인이 원하고 선택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때 개인화가 개인주의 이기주의와 관계없는 개념임을 명시해도(신경아, 2013: 267), 간혹 이기적 여성이 가족 돌봄은 방치한 채 자신만을 위해 직업을 선택하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2018년 9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주최한 ‘중소기업 일·생활 균형 활성화 방안’ 포럼에서, 청년들의 이기적인 가치관을 저출산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했던 한 야당 정치인의 발언은 이런 인식을 드러낸다⁷⁾.

그러나 호네프의 이론에 비추어 이런 인식은 그리 타당하지 않다. 먼저 외부와 상호작용하며 반응을 생성하는 “I”는 언제나 타자의 인식인 “me”를 성찰한다. 때문에 가족 돌봄보다 직업을 선택하는 행위반응은 개인의 선호에 기댄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다. 오히려, 타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적어도 타자의 인정을 얻기 위한 선택이다. 전근대사회에서 개인에게 주어진 역할과 규범을 완수하면서 획득할 수 있었던 공동체 구성원들의 인정과 이를 통한 사회적 자아 획득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근대사회에서 개인적 성취를 증명해 타자의 인정을 얻고 사회적 자아를 획득하려는 “I”의 행위전략이다. 그러나 독립성과 자율성의 증진으로서의 개인화 개념으로 이런 타인의 인정에 기댄 자아정체성과 이를 위한 행위선택을 해석하기 어렵다. 이를 위해 개성화(individuation) 개념을 살펴보자.

개성화(individuation)는 개인이 타인과의 사회적 연관 속에서 그렇지만 그 타인과 자신을 구별하면서 자아를 획득하는 과정을 포착하는 개념으로 심리학에서 사용되었다(Fordham, 1958). 즉, 갓 태어난 영아는 자신을 바라보는 타인, 즉 일차적 양육담당자의 시선에 기대어 우선적으로 자아에 대한 상을 갖는다. 그리고 영아가 자신을 바라보는 타인, 즉 양육담당자와 자신을 분리해 인식할 때 비로소 자아(ego)가 형성된다. 사회적 관계 속에 놓이지 않았을 때, 즉 아무도 영아를 봐주지 않았을 때, 영아는 자아(ego) 이미지를 발달시킬 수 없다. 그리고 양육자가 아니라 양육자가 바라보는 대상이 자기임을 인식할 때 비로소 자아를 발달시킬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인간의 발달과정에서 자아의 형성을 이해하기 위해 활용되었던 개념은 행동경제학에서 재해석된다. 이를 위해 데이비스(2013)는 먼저 자기이익 추구를 경제적 행위선택을 위한 일원론적(monism) 기준으로 설명하던 주류경제학적 관점을 비판한다. 그리고 행동경제학의 관점에서, 타인과 구별됨과 동시에 사회에 뿌리내린 사회적 존재인

7) “나 잘살려고 애 안넣는다고?.. 한국당에 붙난 청년들.(해럴드경제, 2018.9.10.)

행위자를 규정하기 위해 개성화(individuation) 개념을 활용한다.

데이비스의 개성화 개념에 따를 때, 개인은 타인과 구별되며 동시에 공동체에 단단히 뿌리내려(embedded) 자아정체성을 획득한다. 이때 자기 이익 실현과 사회적 의무가 성별로 분리되어 추구되는 것이 아니다. 한 개인이 동시에 양쪽 모두 추구한다. 이런 개성화 개념을 활용할 때, 젠더화된 도덕이론으로 행위자의 행위선택을 해석하는 것은 미흡하다. 다시 말해, 남성은 자율성을 증진시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일을 선택하고, 여성은 타인을 돌보는 돌봄 윤리를 발달시키는 것으로 보았던 젠더화된 도덕 이론은 현상을 포착하는데 유효하다(Gerson, 2002; West & Zimmerman, 1987). 그러나 여성과 남성 모두를 구조와 상호작용하는 주체적인 행위자로 인식하기에 미흡했다. 개인은 때론 이기적이고 때론 이타적이며, 이 상반된 두 전략을 조화시키고 타협해 행위를 선택한다. 즉 전통적으로 의무 지워진 돌봄을 수행하는 것은 타인을 배려하고 이타적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를 통해 자아정체감을 획득하려는 자기 이익추구와 얽혀 있다. 마찬가지로 전통적으로 의무 지워졌던 돌봄 수행에서 벗어나 직업인으로 근대적 자아를 획득하려는 것은 자기 이익 추구가 아니다. 개인적 성취가 타인의 인정을 획득하는 기준이 된 맥락에서, 사회적 존재로 뿌리내리기 위한 행위전략이다.

인간은 역사적으로 확립된 인정 질서에 맞을 내리고 자신들의 규범적인 원칙을 정당화 한다(Fraser & Honneth, 2003: 137). 때문에 사회적으로 합의된 규범, 즉 일반화된 타자(the generalized other)는 언제나 행위자의 일상적 실천, 행위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성찰하는 기준이 된다. 따라서 개인적 성취로 타인의 인정을 얻는 것이 우선시되는 문화적 맥락에서 직업적 성취를 피하는 행위전략은 다른 행위 선택을 억누를 수 있다. 때문에 평등의식이 고양된 여성과 남성은 일과 가족 돌봄을 평등하게 나누기보다, 모두 일을 우선할 수 있다. 자기이익 실현을 중심으로 근대적 개인의 출현을 이야기했던 개인화(individualization) 개념은 사회로부터 부여된 의무로부터 해방을 외치는 이기적 개인이란 의도치 않은 해석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이에 반해, 타인과 구별되며 동시에 사회에 뿌리내리는 자아정체성 획득을 의미하는 개성화(individuation) 개념은 행위자의 행위선택 전략이 개인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언제나 맞물려 있음을 분명히 했다. 사회적 요구는 개개인의 성찰·반응·조정을 거쳐 집합적 지향성(collective intentionality)으로 작동한다(Davis, 2003: 132-143). 집합적 지향성은 개인의 욕구와 이해, 사회적 규칙·규범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성찰되고 조정되어 생성되는 행위전략이다.

집합적 지향성은 도구적 합리성에 바탕을 둔 자기이익 추구만을 위한 지향

도 아니고, 집단의 규칙과 규범에 강제된 지향도 아니다. 즉,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근대적 주체가 되기 위해 결혼·출산·육아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 성취란 새로운 사회적 규범을 의무적으로 따르는 것도 아니다. 개개인은 타인의 인정을 획득하는 세 가지 영역 (사랑, 법, 개인적 성취)에서 각각의 가능성을 성찰하고 이에 따라 반응하며 행위를 조정한다. 때문에 과도하게 일상의 삶이 시장에 잠식된 한국사회에서, 다른 영역에서 타인의 인정을 얻고 이로 자아정체성을 획득하는 가능성에 대한 성찰은 꼭 필요하다. 이런 가능성을 상상할 때, 평등의식이 고양된 남성은 적극적으로 가족 돌봄을 분담할 수 있다. 이때야 비로소 평등하게 일과 돌봄은 분담되고, 일과 돌봄을 통해 향유할 가치들이 개개인의 일상을 풍요롭게 만들 것이다.

IV. 일상의 삶에서 친밀하고 사적인 영역의 목적과 기능

과도하게 일상의 삶이 시장에 잠식된 한국사회에서, 삶을 재전유하기 위해선 이에 대한 가치 발견이 시급하다. 앞서 얘기했듯이,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많은 정책들이 추진되었다. 정책방향은 노동시간을 줄여 개인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개인이 삶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하지 못한다면, 더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해,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더군다나 개인적 성취가 타인의 인정을 획득하는 우선적인 문화적 관념으로 작동하는 근대사회 맥락에서, 삶의 가치에 대한 고찰은 개인이 자유롭게 자신의 욕망을 인식하고 발현시키기 위해 필요하다. 이때 탈근대적 가치로 여겨지는 자아실현, 개인이 자유롭게 생활양식 (life style)을 선택하려는 욕구 등이 비로소 개인의 '선택'이 될 수 있다. 근대사회에서 개인이 일을 통해 창출하는 가치를 향유하고 이를 통해 획득하는 자아정체성은 당연히 중요하다. 그와 동시에, 친밀하고 사적인 영역에서 서로의 관계 속에서 창출되는 애정·돌봄의 가치를 향유하고 이로 획득되는 자아정체성 또한 개인의 안녕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본 장에서는 친밀하고 사적인 영역에서 향유하는/ 할 수 있는 가치에 대해 고찰한다.

1. 가치 향유의 삶

클라머(Klamer, 2017)의 가치에 기반한 경제(a value based economy)란, 기존의 일원론적 물질적 가치 중심에서 벗어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다양한 가치를 포착하고 향유할 때 아리스토텔레스적 삶의 본질 (good life)에 이를 수 있다는 개념이다. 저자는 물질적 가치 이외의 가치를 설명하면서 집을 예로 든다. 집은 가격이라는 물질적 가치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집을 떠올릴 땐, 그 공간에서 함께 시간을 나눴던 사람(가족)들, 그들과의 관계, 일상의 기억들, 모든 것이 어우러진다. 때문에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갈 때, 금전적으로 얼마짜리인 집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향유할 삶으로 향하는 것이다. 일상의 삶에서 집의 가치는 시장에서 매매되는 금전적 가치가 아니다. 일상에서 집의 가치는 그 안에서 가족과 영위하고 향유하는 가치다. 향유하는 가치는, 함께 나눈 삶의 조각들, 함께 계획하는 미래에 대한 전망 등을 매개로 몸에 체현된다.

클라머(2017: 146-154)는 가치가 발생·향유되는 5가지 영역을 (가족 (oikos), 사회, 문화, 정부, 시장) 구분하고, 한 예술가의 작품을 예로 시장에서 측정되는 가치만으로 인식할 수 없는 다른 가치를 설명한다. 만약 6개월 동안 작업한 예술작품이 시장에서 50만원에 팔렸다면, 그 예술가는 6개월 동안 50만원의 가치를 생산한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 그러나 6개월 동안 그 예술가는 사회 속에서 다른 작가들과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시간, 정서, 지식, 또는 물질적으로 기여했을 것이다. 가령 작품 활동에 의기소침해 있던 다른 작가를 정서적으로 지지·지원해 다시 작품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도왔다면, 이는 그 작가가 생산한 다른 가치다. 의기소침했던 동료 작가가 심리상담사에게 상담을 받았다면 상담료를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그 가치는 상담료로 가치화된다. 만약 그 작가가 동료와 지적으로 소통하며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에 영감을 주었다면, 이 또한 그 작가가 생산한 다른 가치다. 시장이 아닌 일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삶을 나누면서 창출되고 향유되는 이런 모든 가치는, 작가가 생산한 50 만원이란 상품가치에 포함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측면에서, 예술가의 작품은 문화적 가치를 생산한다. 또 가족 영역에서 그 예술가는 물질적으로 파트너의 도움에 의존할 수 있지만, 파트너와 정서적 안녕을 위해 상호 기여하고 아이들을 돌보기도 한다.

이렇게 삶에서 향유되는 다양한 가치들은 물질적 가치처럼 명징하게 표현되지 않아 그동안 학문적으로도 정부정책에서도 논의되지 못했다. 저자는 일상

의 삶에서 뿐 아니라, 정부정책도 물질적 가치 이외의 가치를 포함할 때 정책 대상자의 삶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논의한다. 삶은 '양'이 아니라 '질'로 포착될 수 있으며 (p.219), 이를 위해 그동안 주류경제학을 중심으로 '양'을 중심으로 생각하던 접근법에서 벗어나 '질'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전환 (p.217)을 꾀하기 위한 목적을 밝힌다. 그동안 가사/돌봄 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환산해 수치로 그 가치를 명확히 드러냈던 많은 연구들(권태희, 2006; 김정희, 1993; Yoon, 2014)의 유의미성은 두말이 필요 없다. 그러나 클라머의 가치에 기반한 경제 관점을 고려할 때, 과연 그 가치를 매일의 일상에서 행위자들이 어떻게 향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정부정책은 단순히 시간적 균형을 넘어 일과 일상에서 개개인들이 누리는 가치의 균형까지 포괄할 수 있다. 다양한 가치를 향유하는 일상은 개인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그동안 가사/돌봄 노동의 가치를 물질적 가치로 환산했던 연구들이 밝혀낼 수 없었던, 사적이고 친밀한 영역에서 향유하는/할 수 있는 가치에 대해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

사적이고 친밀한 영역에서 향유하는/할 수 있는 가치에 대해 고찰하기 위해서는, 클라머의 다섯 가지 가치 영역 구분보다 경제에 대한 문화인류학적 접근으로, 시장경제는 인간 경제활동의 한 부분임을 밝혔던 폴라니(Polanyi, 2001; Polanyi & Pearson, 1977)의 영역 구분이 더 적절하다.

2.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사회경제적 관점으로

앞선 논의를 살펴보면, 데이비스는 자기이의 실현만을 개인의 행위선택 동기로 보았던 주류경제학의 관점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성화(individuation) 개념을 활용했다. 클라머는 일원론적 물질가치 중심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간이 삶에서 향유하는 다양한 가치를 논의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폴라니의 연구는 경제를 시장경제(market economy)로 환원한 주류경제학의 관점에서 벗어나기 위한 논증이다. 경제적 인간을 진정한 인간으로, 경제적 체계를 진정한 사회로 여기는 잘못된 결론에서(Polanyi & Pearson, 1977: 12) 벗어나기 위해 폴라니는, 시장 이외 영역에서 벌어지는 경제활동을 이론화했다. 폴라니의 연구는 시장을 다양한 경제영역의 하나로 그 의미를 축소시키고, 이윤추구가 목적이 아닌 다른 경제활동들을 분명히 드러냈다.

원시사회 부족들 사이의 다양한 경제활동을 관찰해 폴라니는 세 가지 경제

행위, 교환(exchange), 재분배(redistribution), 호혜성(reciprocity)을 구분한다(Polanyi, 2001; Polanyi & Pearson, 1977). 각각의 경제활동은 그것을 작동하게 하는, 즉 재화와 서비스가 배분되는 방식과 경제활동 당사자의 태도가 구분된다. 먼저 교환관계에선 임의로 파트너가 된 두 주체 사이에서 가격을 옥신각신 흥정하며 재화와 서비스는 이동한다. 가격을 흥정하는 것은 이익추구를 위한 행위전략이다. 둘째, 재분배의 경우, 관습이나 규칙, 또는 중앙의 결정에 따라 재화와 서비스는 중앙으로 징수되고, 다시 불평등하게 분배된 곳에 재 할당된다. 이는 이익 추구하고 다른 불평등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셋째, 호혜성의 경우 공동체 내에서 정해진 규칙에 맞는 두 당사자 사이에서 재화와 서비스는 선물과 선물에 대한 보답의 형식으로 전달된다. 이때 정해진 두 당사자 사이에 재화와 서비스가 일방향으로 흐르기도 한다. 가령, 자녀 양육 시기 재화와 서비스는 주로 부모에게서 자식에게로 흐른다. 이후 부모가 노인이 되었을 때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기도 하지만, 이는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교환, 즉 이윤추구가 목적이 아니다. 그보단 부모와 자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고, 이는 곧 공동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호이익이다.

세 가지 경제행위에 대한 폴라니의 이론은 경제적 합리성으로 인간의 모든 행위를 설명하는 경제에 잠식당한 사회를 전복해, 경제를 사회 속에 뿌리내리게 한다. 따라서 이는 시장에잠식당한 일상의 삶을 인식하기 위한 이론적 틀로 유용하다. 한편 이윤추구 이외의 다른 목적을 지닌 경제행위를 밝힌 폴라니의 이론을, 반 스타베런(Van Stavelen, 2001)은 각 영역에서 인간이 향유할 수 있는 다원적 가치에 대해 이론으로 발전시킨다. 반 스타베런은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일원론적 가치체계를 비판하면서, 인간이 다양한 경제영역에서 창출하는 다양한 가치를 이론화했다. 반 스타베런의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시장 영역에서 교환이란 경제활동으로 경제적 독립을 이루어 자유의 가치를, 정치 영역에서 분배를 통해 정의의 가치를, 돌봄 경제(care economy) 영역에서 증여(giving) 활동으로 돌봄의 가치를 향유한다. 행위자가 각 영역에서 해야 할 다양한 역할을 잘 수행할 때, 행위자는 이 세 가지 가치들을 균형 있게 향유하며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된다. 이 이론에 따를 때, 시장에 잠식당한 일상의 삶은 결국 자유의 가치와 돌봄 가치의 불균형한 향유를 의미하고, 이에 아리스토텔레스적 삶의 본질, 즉 좋은 삶(good life)에서 멀어진다.

반 스타베런은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교환활동도 이윤추구를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교환 당사자의 상호이익을 위한 것임을 문제제기 한다(Van Staveren, 2001: 62). 그리고 폴라니의 호혜성(reciprocity) 영역을 돌봄 이론과 연결해

돌봄 영역으로 구분한다. 플라니의 호혜성 영역과 마찬가지로, 돌봄 영역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유통 방식은 증여(giving)다. 이는 이윤을 위한 것도, 재화와 서비스가 부족한 곳을 채우는 분배정의를 위한 것도 아니다. 증여는 계약을 따르는 것도, 법·제도적으로 규정된 규칙을 따르는 것도 아니다. 단지 돌봄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에 의존해 돌봄과 애정의 가치를 향유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돌봄노동이 관계를 발전시키는 노동이라는 돌봄에 대한 정의와 부합한다(Himmelweit, 2000). 그리고 이때 선물이 그렇듯, 동시에 주고받는 것도, 반드시 같은 가치를 주고받는 것도 아니다. 무엇보다, 돌봄의 가치는 외부에서 규범으로 행위자에게 강제되는 도덕률이 아니라, 그 가치를 향유하면서 발생하는 윤리적 가치(virtue ethics)다 (Van Staveren 2007). 이는 긍정의 심리학에서 밝힌, 기대하지 않았던 선물(물질이던 애정이던)을 받았을 때, 그 가치를 향유하면서 발생하는 고마움과 이에 따라 받은 것에 대해 기꺼이 보답하려는 마음과 행위의 발생이다(Fredrickson, 2009: 41-42). 이때 발생하는 긍정적 심리, ‘사랑’의 마음은 심리적·정서적으로뿐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개인을 건강하게 만들고, 개인의 삶을 번영하게 한다(Fredrickson, 2013).⁸⁾

돌봄의 가치가 발생하는 곳은, 시장영역이나 정부영역이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들과 일상을 나누는, 계약이나 규칙에 강제되지 않는 공동체 영역이다. 돌봄 가치란 돌봄 행위와 구분된다. 시장영역에서 지불노동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 돌봄 행위가 이루어진다. 정부 영역에서, 가령 사회복지 공무원은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돌보기 위해 가정방문을 하기도 한다. 즉 돌봄 행위를 한다. 그러나 시장에서 돌봄 행위는 평등 교환을 위한 것이고, 정부영역의 돌봄 행위는 재분배를 위한 것이다. 이는 각각 다른 가치와 연관되고, 이런 다른 가치들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공동체 영역은 이 글에서 시장에 잠식당하지 않은 일상의 삶을 위해 살펴보고자 했던, 친밀하고 사적인 영역이다. 혼인·혈연을 바탕으로 한 가족은 이런 공동체의 한 유형이고, 시간과 삶을 공유하고 나누는 다양한 관계들이 포함된다. 이 친밀하고 사적인 공동체 영역에서, 돌봄이 필요한 나에게 누군가 돌봄을 선물로 제공했을 때 느낀 고마움은, 다시 상대가 돌봄이 필요할 때 받은 것을 기꺼이 보답하며 나누는 행위를 발생시킨다. 이 선물로 제공되는 돌봄은 관계 속에서 애정을 바탕으로 하는 것 이외 다른 이유는 없다. 즉, 내가 이런 개인적 성취에 대한 보상도 아니고,

8) 긍정의 심리학에 따르면, 두려움, 불안 등의 부정적 심리는 그 심리를 느끼는 행동을 피하게 해 개인이 위협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고, 반대로 기쁨, 사랑 등의 긍정적 심리는 개인을 육체적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해 개인의 삶을 번영시키는 기능이 있다 (Fredrickson, 2009: 18-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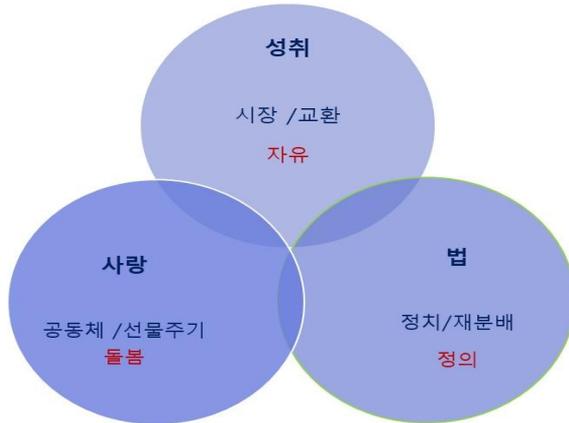
분배에서 소외되었기 때문에 제공되는 재분배도 아니다. 내가 이론 개인적 성취에 대한 보상이라면, 성취를 이루지 못했을 때 받을 '벌'이 조건이다. 분배에서 소외된 상태는 일종의 불명예를 동반한다. 이렇게 친밀하고 사적인 영역에서 향유하는/할 수 있는 돌봄/애정의 가치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사랑스럽게 바라봐 준 타인의 눈을 통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고 인정하는 자아정체성을 획득하기 때문이다.

아무런 조건 없이 주는 사랑으로 보통 '모성'을 이야기 한다. 그러나 근대 형성시기 발생했던 모성이데올로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영역에서 향유하는 돌봄/애정/사랑의 가치와 다르다. 먼저 모성은 여성의 성역할을 강제하는 논리로 적용되었다. 여성의 성역할은 전근대사회에서 "봉제사점빈객"을 행위 양식으로 하는 가문의 며느리였다. 이는 근대사회에서 "현모양처"란 근대 여성/어머니로서의 역할로 변화되었다(김경일, 2012; 김현주, 2007). 이때 모성담론은 "현모양처"란 여성정체성을 강제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다. 모성은 생물학적인 여성이 생물학적으로 담지하는 본능으로 이야기되며 행위자 외부에서 행위를 강제하는 도덕률로 작동했다. 이는 앞서 돌봄의 가치로 이야기했던 가치를 향유하면서 발현되는 윤리적가치(virtue ethics)와 다르다. 마찬가지로 측면에서 둘째, 돌봄과 애정을 나누는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다. 간혹, 재화와 서비스는 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지만, 이때 향유하는 가치는 서로 나누고 발현시키는 가치다. 가령, 부모가 아이를 키울 때, 재화와 서비스는 주로 부모에게서 아이에게로 흐른다. 반면 애정의 가치는 부모가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할 때 서로의 반응에 따라 발현되고 향유되는 가치다. 만약 부모가 화를 내며 제화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물질적 가치는 전달되지만, 애정의 가치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발현되고 향유되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노인이 된 부모에게, 자녀가 화를 내며 음식을 제공한다면, 이때 발현되는 애정의 가치는 없을 수 있다. 이렇게 돌봄과 애정의 가치란, 서로의 반응에 따라 더 많은 가치를 또는 더 적은 가치를 나누고 향유할 수 있다. 반면 모성담론에서 모성이란 사랑은 여성으로부터, 어머니로부터 흘러넘치는 일방으로 주는 가치일 뿐, 서로가 나누는 가치가 아니다.

한편, 각 영역에서 창출되는 가치는 상호 대체가능하지 않다. 돌봄 영역에서 이루어진 돌봄 노동의 물질적 가치를 환산해 증명해도, 그 물질적 가치를 다른 재화로 교환할 수 없다. 무엇보다 돌봄 영역에서 향유하는 가치는 돌봄/애정의 가치이지 물질적 가치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간호를 받을 때, 그 가치는 나를 애정으로 돌봐주는 가치가 아니다. 내가 돌봄이 필요할 때 이를 채울 상품을 살 수 있는, 즉 경제적 자유의 가치가 우선이다.

만약 내가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필요한 돌봄을 제공받지 못하고, ‘필요의 갑옥’에 갇히게 된다. 즉 자립하지 못해 자유는 상실된다. 물론 시장영역에서 돌봄제공자도 자신이 제공한 노동과 교환되는 화폐 획득이 목적이다. 육체적 삶의 필요를 스스로 채우고 자유의 가치를 향유하기 위해 하는 노동이다. 시장영역에서 돌봄은 선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듯 각 영역에서 창출되는 가치는 상호 대체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인간과 인간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관계는 자로 재듯 분명하게 구분되긴 어렵다. 가령 돌봄시장에서 환자를 돌봐줄 노동력을 구입했을 때,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과 환자 사이에 시나브로 관계가 형성된다. 만약 관계가 좋다면,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은 자신이 받는 노동력의 대가보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돌봄을 더 제공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환자는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개인적인 사정이 생겼을 때, 계약된 시간보다 일찍 퇴근하도록 배려해줄 수 있다. 또는 시장에서 맺는 계약관계가 자유로운 교환을 보장하기 위해선, 정치영역에서의 법·제도적인 보완이 (공정거래법, 독점규제 법 등) 필요하다. 이렇듯 각각의 영역은 일정정도 중첩되고 서로를 보완한다.

[그림 3]에서는 호네프가 구분했던 근대사회에서 타인의 인정을 획득하는 영역과 반 스타베런이 이론화한 인간의 경제행위가 창출하는 가치 영역을 통합했다. 먼저 호네프가 근대사회에서 타인의 인정을 획득하는 주도적인 영역으로 이야기했던 개인적 성취는 시장 영역과 대응되고, 이 속에서 개인은 자유의 가치를 향유한다.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시장 영역에서 개인은 차지한 이윤에 따라 더 많이 혹은 더 적게 타인의 인정을 획득할 수 있다. 둘째, 근대사회에서 법은 정치영역으로, 이 속에서 재분배는 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이를 통해 개인은 정의의 가치를 배우고 향유한다. 공적 가치를 위해 헌신한 개인은 명예를 얻고 이를 통해 타인으로부터 특별한 인정을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친밀하고 사적인 영역인 사랑의 영역에서 개인은 돌봄과 애정을 선물로 증여하고(giving), 나누고, 향유한다. 이를 통해 개인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긍정하고 사랑하는 자아정체성을 획득한다. 반 스타베런이 밝혔듯, 각각의 영역에서 창출되는 모든 가치와 이의 균형은 개인이 좋은 삶(good life)을 살기 위해 꼭 필요하다.



[그림 3] 인정 영역과 각 영역의 가치들

과도하게 시장에 잠식당한 일상의 삶, 이로 인한 저출산 현상이 만연한 한국사회에서는, 개개인이 이 세 가지 가치를 조화롭게 향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정성호(2009)는, 아이양육이 삶에서 중요하고 삶을 풍요롭게 한다고 느낄 때 출산력이 상승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공동체 영역에서 돌봄과 애정의 가치를 나누며 향유하지 못했을 때, 그것의 중요성을 느끼기 어렵다. 오히려 삶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물질적 가치로 즉 시장에서 대체품으로 이를 채우려 할 수 있다. 혹실드(Hochschild, 2012)의 “외주화된 자아(the outsourced self)란 표현은 이를 잘 표현한다. 한때는 사적 삶의 부분이었던 것들(사랑, 우정, 아이양육 등)이 시장에서 상품으로 대체된다. 데이트하기 위해 연애헌 수업을 수강하고, 인연을 찾기 위해 결혼정보 회사에 등록하고,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결혼식장 하객을 채우고, 아이양육은 좋은 보육시설에, 아이 생일잔치는 이벤트 회사에 맡기고, 바쁜 부모를 대신할 놀이교사를 고용한다. 그리고 이 사적 생활을 시장에서 구입할 돈을 벌기 위해, 사적인 삶 대신 다시 노동시장으로 달려간다.

이때 출산·양육에 드는 비용이 아이로 얻는 혜택보다 커 보인다면, 합리적 선택이론에 따라 출산을 기피하기 쉽다. 하지만 이를 개인의 선택으로 보긴 어렵다. 신자유주의 시장체제로 변화하면서 개인은 개인적 성취를 추구하기 위해 시장에서 높은 생산력을 가졌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시장에 잠식된 삶에, 자아실현, 개인적 선호에 대한 만족 등 탈물질적 가치는 뿌리내리기 힘들다. 양성평등 의식이 높은 여성이 출산은 꺼린다는 해석은, 가족은 등한시한 채 자기이익만 추구하는 이기적 여성 담론의 다른 표현이다. 과도하게 일상이

시장에 잠식된 상황에서 일과 가족 사이 개인의 선호·선택을 이야기하는 것은, 슈퍼맨/슈퍼우먼만을 롤(role)모델로 선정하고 나머지를 실패자(loser)로 규정하는 담론을 생산했는지 모른다. 다시 말해, 이런 진단들은 부분적으로 현상을 설명하지만, 개인이 구조와 조응해 생성하는 행위선택 맥락을 고려하지 못했다. 그 결과 결혼·출산·양육을 포기하며 더 많은 물질을 추구하는 집단적 지향성(collective intentionality)을 개인의 취향 가치관의 문제로 호도했는지 모른다.

현 한국사회에서 저출산을 도출하는 행위선택 맥락은, 사적인 삶이 시장에 잠식당한 상황에서 개개인이 친밀하고 사적인 영역에서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획득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친밀하고 사적인 영역에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고 인정해주는 “me”를 껴안고 그대로도 괜찮은/좋은 나란 자아정체성을 획득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돌봄/ 애정을 나누며 관계를 발전시키지 못한, 외주화된 부모를 만났던 관계에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스럽게 쳐다보는 눈빛을 경험하기 어렵다. 아이와 시간을 나누기보다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일에 달려갔던 부모는 아이와 애정과 사랑을 향유하는 경험이 부족하다. 경험하고 향유하지 못한 가치는 인지하기 어렵고 따라서 욕망하기 어렵다. 욕망하지 못하는 결혼·출산·양육의 가치를 사회적 의무로 강요할 순 없다. 단지 그 가치에 대한 욕망을 일깨울 무엇을 시작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 장에서 이루어진 친밀하고 사적인 영역에서 향유하는/할 수 있는 가치와 그 가치를 향유하면 획득할 자아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그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

V. 결론 및 논의

이 글에서는 현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위기로 인식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에 대해, 개인의 행위선택 맥락을 바탕으로 재고찰하고, 개인의 삶에서 친밀하고 사적인 영역이 차지하는 역할과 기능에 대해 이론적으로 논의했다. 이는 기존에 저출산 현상을 진단한 논의들이 다 각도로 엮인 원인들의 유기적 관계를 고려하지 못해 원인에 대한 일면적 해석에 그쳤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했다. 가령, 청년들을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삼포세대로 규정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주된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원인 분석은 초기산업화 시기 전국가적 빈곤상황에서도 결혼·출산을 당연시했던 맥락을 설명하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젠더화된 도덕 발달이론은 여성이 가족 돌봄을 담당하고,

남성이 자율성 획득을 위해 사회 진출을 했던 현상을 해석하는데 유용했다. 그러나 이 이론은 평등의식이 고양되는 시기 여성이 사회진출로 적극적으로 이동하는데 반해, 남성은 가족 돌봄 분담에 소극적인 현상을 해석하기 어렵다.

이에, 사회구조와 조응하는 개인의 상호작용을 개인의 자아정체성 획득 전략의 측면에서 고찰했다. 먼저 호네프의 이론에 따를 때, 개인은 타인의 인정을 통해 자아정체성을 획득한다. 그리고 타인의 인정을 얻는 기준은 근대사회에서 개인적 성취라는 가장 중요한 기준을 포함해 세 가지로 분화된다. 둘째, 전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근대적 자아를 획득하는 개인화(individualization)보다 타인과 구분되면서 동시에 사회에 뿌리내린 자아정체성 획득이란 개성화(individuation) 개념의 유효성을 논의했다. 이 두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결혼·출산·육아의 회피라는 현 저출산 현상을 도출하는 개인의 행위선택을 개인적(직업적) 성취를 이루고 이를 통해 타인의 인정을 획득하려는 전략으로 해석했다. 이는 기존에 청년·여성들의 선택을 간혹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 선택으로 비판했던 인식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논박했다.

마지막으로 과도하게 시장에 잠식된 삶을 성찰하기 위해, 친밀하고 사적인 영역의 기능과 의미에 대해 이론적으로 논의했다. 이를 위해, 인간의 경제활동 영역을 시장으로만 제한하고 자기이익 추구를 경제활동의 유일한 이유로 여긴 주류경제학을 비판한 이론들을 고찰했다. 그리고 세 가지 경제활동 영역과 각 영역에서 창출되는 다양한 가치들을 논의한 반 스타베런의 이론과 호네프의 세 가지 인정영역을 통합했다. 이에 따라, 친밀하고 사적인 공동체 영역에서 개인은 돌봄/애정/사랑의 가치를 향유하며, 타인의 인정을 얻고 자아정체성을 확립함을 논의했다. 이는 시장영역에서 개인이 많은 성취를 이루었을수록, 정치 영역에서 더 많은 명예를 획득했을수록 타인으로부터 더 긍정적인 인정을 얻는 것과 비교해,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는 자아정체성을 획득한다는 의미가 있다. 또 반 스타베런이 밝혔듯이, 각 영역에서 창출되는 다른 가치들은(자유, 정의, 돌봄) 상호 호환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사적이고 친밀한 영역에서의 삶의 쇠퇴를 의미하는 저출산은, 개인이 일상에서 향유하는 자유와 돌봄 가치의 불균형을, 이로 인해 아리스토텔레스적 삶의 본질, 즉 좋은 삶(good life)에서 멀어짐을 의미한다.

기존의 논의와 다소 다른 접근방식으로 저출산 현상을 고찰한 본 논문은, 세 가지 측면에서 기존 논의에 기여한다.

첫째, 독립성과 자율성을 증진시켜 근대적 주체가 되는 개인화(individualization) 개념은 여성, 돌봄, 저출산과 관련해 주로 쓰인 개념이다. 그러나 이 개념은 전통은 구속을 근대는 해방을 의미해, 전통에 대해 부정적인 근대에 대해 낭만

적인 시각을 내포하고 있다. 또 사회란 행위자의 외부에 행위자와 관계없이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사회란 행위자들의 행위로 구성되고 동시에 그 행위를 제한하는 조건이 되는 사회와 행위자의 상호작용을 간과한다. 때문에 그 상호작용에 내재한 행위자들의 주체성을 포함하지 못하는 개념이다. 이에 반해, 이 글에서 활용된 데이비스의 개성화(individuation) 개념은 타자성과 분리될 수 없는 자아를 포착해, 개인을 일면적으로 이해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한다. 특히 젠더연구와 관련해서, 자기이익 실현과 사회적 의무가 성별로 분리되어 추구되는 것으로 이해했던 젠더화된 도덕발달 이론의 한계를 드러냈다. 그리고 한 개인이 동시에 양쪽을 모두 추구하는 것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인간은 누구나 이타적이며 동시에 개인적인 다면적 존재임을 인식해, 사회현상의 다층적 결합을 포착할 수 있게 한다.

이와 연관해 둘째, 개인의 행위선택을 구조와 타인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해석한 것은 개개인의 행위선택이 뿌리내린 사회성을 분명히 드러냈다는 의의가 있다. 기존에 저출산과 관련한 개인의 행위선택은, 주로 경제적 조건으로 즉 구조의 문제로 환원되거나 이기심의 발현으로 협소하게 이해되었다. 무엇보다 행위선택을 개인적 수준의 기호(taste)로 해석해 과학적 학문적 연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는 심리적 주제로 다루면서 구조와의 연관성을 주목하지 못했다. 이에 반해 이 글에서는 개인의 욕구와 이해가 사회적 규칙과 규범과 상호작용하면서 성찰·조정 되고 행위로 표출되는 '집단 지향성'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이는 개인의 행위선택을 사회적 주제로 포착했다는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셋째, 이 글에서 밝힌 사적이고 친밀한 영역이 개인의 삶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기능에 대한 논의는, 시장에 잠식되어서도 안 되고 국가권력에 의해 통제 당해서도 안 되는 '사적인 삶'의 필요성을 논의의 장으로 견인했다는 의미가 있다. 봉건적 신분제 사회에서 개인은 신분제 속 누구로 존재했다. 공동체가 기초적인 생활기반인 조건에서 개인으로 존재하긴 어려웠다. 때문에 개인과 사적영역의 탄생이 근대와 함께 태동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제1차 근대 시기는 법, 즉 정치영역에서 노동자·여성 등 집단적 정체성을 인정하고 제도화하는 시기였다. 이에 반해, 개개인의 일과 삶의 균형이 사회적 의제로 제기되는 현 후기근대에서 어쩌면 개인과 사적인 삶은 비로소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런 측면에서 사적이고 친밀한 영역에서 돌봄/애정의 가치 향유, 이를 통한 자신 그대로의 자아정체성 획득에 대한 이 글의 논의는 유의미하다. 즉 집단적 정체성과 별개인 타인과 구분되는 나, 개인성에 대한 논의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논의와 다소 다른 접근방식으로 저출산 현상을 고찰한 이 글은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우선, 이론과 실재는 언제나 꽤 어긋난다. 즉 사적이고 친밀한 영역에서 향유하는 돌봄과 애정의 가치를 과도하게 시장에 잠식당한 삶의 한복판에 있는 행위자들이 인식·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는 곧 경험적 연구의 필요를 제기한다. 상호소통하며 서로 보완하는 경험적 연구와 이론적 논의를 통해 사회적 현상은 더 분명하게 인식되고 이때 비로소 대안적 방식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둘째, 개인의 행위선택의 주체성을 포착하는 것이, 자칫 젠더관계에서 여전한 가부장제의 습속과 권력관계를 가릴 수 있다. 그리고 권력관계 때문이든, 문화적 습속이든, 불평등한 가사/돌봄 노동 분담은, 사적이고 친밀한 영역에서 향유할 수 있는 가치를 볼 수 없게 만드는 또 하나의 원인이다. 동의하지 않은 개인에게 불평등하게 분담되는 노동은 강제 노동에 가깝다. 그리고 강제노동으로 물질적 가치는 생산할 수 있지만, 돌봄 애정이란 정서적 가치는 생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개인의 행위선택에서 사회성을 포착했다 하더라도, 이를 다시 정책적 논의로 실현가능한 대안을 만들어 개인의 행위선택의 변화를 꾀하기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현 한국사회 저출산 현상을 사회적 위기나 개인의 의무가 아닌 개인의 자아정체성과 개개인의 삶과 연관해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참고문헌

- 강희경(2005). “건강가정’담론의 불건강성”. *경제와사회*, 155-178.
- 권태희(2006). “여성 무급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 *한국여성경제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20.
- 경향신문(2019.1.5). “출산을 줄였다고? 2030 혼인가구는 늘었다” <http://www.khan.co.kr/>에서 2019.1.5. 인출
- 길리건, 캐롤(1997). *다른 목소리로*. 허란주(역). 서울: 동녘. (Gilligan, C. *In a different voic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3)
- 김경일(2012). *근대의 가족, 근대의 결혼: 가족과 결혼으로 본 근대 한국 의 풍경. 푸른 역사*.
- 김영미(2018).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젠더 분석”. *비판사회정책*, (59), 103-152.
- 김정희(1993). “한국주부의 가사노동시간과 경제적 가치 평가”. *대한가정학회지*, 31(4), 37-51.
- 김현주(2007). “1950년대 여성잡지 [여원]과 ‘제도로서의 주부’의 탄생”. *대중서사연구*, 13(2), 387-416.
- 김혜영(2018). “친밀성의 위기와 저출산: 가족정책과 인구정책의 교차성”. *보건복지포럼*, 261, 35-49.
- 신경아(2013). “시장화된 개인화와 복지 욕구 (welfare needs)”. *경제와사회*, 98: 266-303.
- 심영희(2013). “개인화의 두 유형에 관한 연구”. *사회와이론*, 277-312.
- 아시아경제(2019.1.7). “굳이 연인에서 부부로?... 결혼할 이유가 없어요” <http://www.asiae.co.kr/news/>에서 2019.1.7. 인출
- 윤홍식(2011). “가족정책, 복지국가의 새로운 역할: 보편성과 다양성에 대한 요구”. *한국가족복지학*, 33, 5-35.
- 이동욱(2018). “‘사람 중심’ 저출산정책 패러다임으로의 변화”. *보건복지포럼*, 261, 2-5.
- 이재경(2005). “공·사 영역의 변화와 ‘가족’을 넘어서는 가족 정책”. *여성연구*, 137-164.
- 임광국(2018). “저출산 문제와 가족이데올로기”. *교육비평*, (42), 92-117.
- 정성호(2018).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비판적 검토”. *공공사회연구*, 8(2), 36-64.
- 정성호(2009). “저출산에 관한 이론적 접근”. *한국인구학*, 32(2), 161-183.

한인영 & 홍선희 (2011). “여성의 성역할인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6(4), 477-498.

헤럴드경제(2018.9.10.) ““나 잘살려고 애 안넣는다고?”.. 한국당에 빨난 청년들”
<http://biz.heraldcorp.com/>에서 2018.9.10. 인출

Banks, M., & Milestone, K. (2011). Individualization, gender and cultural work. *Gender, Work & Organization*, 18(1), 73-89.

Barstad, A. (2014). Equality is bliss? Relationship quality and the gender division of household labor. *Journal of Family Issues*, 35(7), 972-992.

Bittman, M., England, P., Sayer, L., Folbre, N., & Matheson, G. (2003). When does gender trump money? Bargaining and time in household work.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9(1), 186-214.

Chang, K. S. (2010). *South Korea under compressed modernity: Familial political economy in transition*. Routledge.

Chang, K. & Song, M. (2010). The stranded individualizer under compressed modernity: South Korean women in individualization without individualism.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61(3), 539-564.

Conlon, C., V. Timonen, G. Carney, & T. Scharf (2014). Women (re) negotiating care across family generations intersections of gender and socioeconomic status, *Gender & Society* 28(5): 729-751.

Davis, J. B. (2003). *The theory of the individual in economics: Identity and value*. Routledge.

Davis, S. N., & Wills, J. B. (2014). Theoretical explanations amid social change: A content analysis of housework research (1975-2012). *Journal of Family Issues*, 35(6), 808-824.

Dawson, M. (2012). Reviewing the critique of individualization: The disembedded and embedded theses. *Acta Sociologica*, 55(4), 305-319.

Denzin, N. K. (1969). Symbolic interactionism and ethnomethodology: A proposed synthesi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922-934.

- Elshtain, J. B. (1993). *Public man, private woman: Women in social and political thought*. Princeton University Press.
- Fordham, M. (1958). Individuation and ego development, *Journal of Analytical Psychology* 3(2): 115-130.
- Fraser, N., & A. Honneth (2003). *Redistribution Or Recognition?: A Political-Philosophical Exchange*. Verso.
- Fredrickson, B. (2009). *Positivity*. New York: Three Rivers Press.
- Fredrickson, B. (2013). *Love 2.0: How our supreme emotion affects everything we feel, think, do, and become*. Avery.
- Gerson, K. (2002). Moral dilemmas, moral strategies, and the transformation of gender: Lessons from two generations of work and family change. *Gender & Society*, 16(1): 8-28.
- Greenstein, T. N. (2000). Economic dependence, gender, and the division of labor in the home: A replication and extensio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2(2), 322-335.
- Himmelweit, S. (2000). *Inside the household: from labour to care*. Palgrave Macmillan.
- Hochschild, A., & Machung, A. (2012). *The second shift: Working families and the revolution at home*. Penguin.
- Hochschild, A. R. (2012). *The outsourced self: What happens when we pay others to live our lives for us*. Metropolitan Books.
- Honneth, A. (1996). *The struggle for recognition: The moral grammar of social conflicts*. Mit Press.
- Klamer, A. (2017). *Doing the right thing: A value based economy*. Ubiquity Press.
- Koo, E. J. (2018). "Where is the value of housework?" Re-conceptualizing housework as family care activity. ISS PhD Theses. Erasmus University Rotterdam.
- Mead, G. H. (1967). *Mind, Self & Society from the Standpoint of a Social Behaviorist*. C.W. Morris (ed)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iranda, V. (2011). *Cooking, caring and volunteering: Unpaid work around the world*. OECD Publishing.
- Ochiai, E. (2014). Leaving the West, rejoining the East? Gender and family in Japan's semi-compressed modernity. *International*

- Sociology*, 29(3), 209-228.
- OECD (2016). *OECD Employment Outlook 2016*. Paris: OECD
- OECD (2015). *How's Life? 2015*. Paris: OECD
- OECD (2013). *How's Life? 2013*. Paris: OECD
- Polanyi, K. (2001). *The great transformation*. Boston: Beacon press.
- Tronto, J. C. (1987). Beyond gender difference to a theory of care. *Signs: Journal of Women in Culture and Society*, 12(4), 644-663.
- Van Staveren, I. (2001). *The values of economics: An Aristotelian perspective*. Psychology Press.
- Van Staveren, I. (2007). Beyond utilitarianism and deontology: Ethics in economics. *Review of Political Economy*, 19(1): 21-35.
- West, C., & Zimmerman, D. H. (1987). Doing gender. *Gender & society*, 1(2), 125-151.
- Yoon, Ja-Young. (2014). Counting care work in social policy: Valuing unpaid child-and elder care in Korea. *Feminist Economics*, 20(2): 65-89.

Abstract

Re-recognition of low-birth-rate: the values in the private familiar sphere

Eun Jung Koo*

This paper has two aims. First is to re-interpret the phenomenon of low-birth-rate by understanding the mechanism of behaviour choice. Second is to theorize the values people enjoy/able to enjoy in their private familiar sphere. To do so, this study initially focuses on the behaviour choice of avoiding marriage/ childbirth/ childrearing. The conventional explanations for such behaviour (economic difficulty, increase of gender equality ideology, and individualization) have failed to interpret the high birth rate during the period of severe poverty in the early modern time and why individualization leads to pursuit of career over caring for family. Thus, in order to understand the mechanism of behaviour choice in the interaction between actors and structures, this paper studies Honneth's theory of recognition and the concept of individuation (separating self from others while being simultaneously embedded in the society) in behaviour economics. By doing so, in the context of Korean society where individual achievement is the central method of receiving recognition, the behaviour of avoiding marriage/ childbirth/ childrearing is a strategic decision aimed towards attaining the self through individual/occupational achievement. Third, in order to analyze the function and purpose of private familiar sphere in individuals, I integrate the three spheres of economic activities and their respective values identified by Van Staveren, with Honneth's three areas of recognition. At this point, unlike other spheres where the recognition fluctuates due to gain/loss in the market or honour/dishonour in the politics, individuals are able to flourish through recognition of oneself 'being itself' while sharing and enjoying care/affection/love in private familiar sphere. Drawing upon hitherto discussion, the discourse about low-birth-rate starts, not from the insight of social crisis, but rather from how individuals are able to conceptualize oneself through enjoying the value of care/affection. The value of this paper lies in capturing 'the social' in individual behaviour choice by reconsidering the behaviour

* Research Fellow, Research Institute of Social Science, Sungkonghoe University

choice as a collective intentionality (from the traditional understanding of it as an individual preference).

Keywords : low-birth-rate, individuation, individual achievement, recognition, self-identity, collective intentionality.